

해외종자 잠식 '로열티' 연간 118억원

과수·화훼 국산점유율 15~32%... 무역 연 808억 '적자' 서삼석 "고품질 신품종 개발 농업 미래먹거리 창출을"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종자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약 808억 원(6,755만USD)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도 연간 118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7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산품종 점유율 및 무역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쳐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이었다. 국산 신품종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종자무역에서도 손해를 봤다.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4년 975억원, 2015년 798억원, 2016년 692억원, 2017년 686



억원, 2018년 891억원 등으로 총 4,04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가별 로열티를 살펴보면 일본산 종자 수입금액이 중국에 이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양파종자 수입이 많았는데, 지난해 기준 일본산 양파종자 수입금액은 98억원 가량으로 전체 양파종자 수입금액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산 종자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2014~2018년 장미·국화 등 화훼류와 감귤·버섯 등 외국산 종자 사용대가로 지불된 로열티는 590억원으로 연간 118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사업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로열티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성과제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한빛원전, 공사기간 단축하려다 부실공사"

이개호 "국내 원전 가운데 안전성 가장 취약"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 공극(구멍) 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한수원(당시 한전)이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이 7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CLP 부식 및 공극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2호기에서 CLP 부식이 첫 발견된 2016년 6월 이후 원전(총 22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CLP 부식 777개(107기), 공극 295개(87기)가 발견된 한수원이 조치 중이다.

특히 원전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LP 부식은 777개 중 한빛원전에서 469건이 발견됐으며, 1·2·4호기에서 발견된 부식 건수가 무려 467건(60%)에 달해 한빛원전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극이 한빛원전에만 집중된 이유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부실과



함께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공사하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설계변경 요청당시 발주사와 기술적으로 이를 허락한 한국전력기술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남건물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외부유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며, CLP는 원전설계를 할 때 수명과 함께 해야 하는데도 부식과 공극이 1,000여 군데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원전은 모두 보강재를 제거하고 타설했는데 한빛 3·4호기만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빛원전 전체에서 공극과 부식이 유독 많이 발견되는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의 안전우려를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이 7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종순 장흥군수, 마재주 박람회추진위원장, 김한중 도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기 브리핑

박주선 "외교부 개방직 민간전문가 18% 불과"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44명의 인원을 중 민간 전문가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 의원이 공개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 인제 44명 중 8명만이(18%) 민간 전문

가인 반면, 외교부 공무원은 33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 3(개방형직위)은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



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에 자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호남·전라선 KTX 요금 6,235억 더 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바른미래당)은 7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 오송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호남선과 전라선 이용객들이 9년 동안 6,235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19km에 대한 요금이 차감될 경우 열차요금만 4만6,800원 보다 3,100원 저렴한 4만3,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송 우회 전라선이 운행된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호남선 이용객 약 7,120만명과 전라선 이용객



2,936만명이 왕복 열차 요금 6,235억원을 더 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또 "보다 일괄적인 할 인율을 적용하는 등 추방직 전 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원전사고 피해자 90% 외주업체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이 원전 외주인력에 대해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의 안전관리에도 소

홀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국내원전 정비·정비·수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파견용역에게 맡기고 있다"며 "원전업무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 이런 업무들이 직접관리보다는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 및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원전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수원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력설비 수입 의존 2조8천억 국부유출"

송갑석 "미쓰비시에 매년 수천억...국산화 시급"

발전공기업 5개사에서 사용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 핵심설비 전량이 외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으로 남품대기와 유지보수비로 지불한 금액은 총 6,564억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핵심설비 주요기기 외산 의존율 현황'에 따르면 LNG 발전기 59호기의 가스터빈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며 지불한 총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 5,156억원을 합하면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한국은 전력분야 핵심설비 기술조차도 일본 종속이 심각했다.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으로부터 가스터빈을 구입한 발전사는 서부발전과 동서

동서발전은 남품비와 유지보수비로 총 4,297억원을 독일기업인 지멘스(SIEMENS)에 지불했다. 송 의원은 "전력핵심설비는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기술임에도 기술종속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정부가 시장이 실패할 때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기술독립을 이루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제주도 무사증제도 밀입국 통로 변질"

손금주 "5년간 불법체류 등 344명 적발돼"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 및 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34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7일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9월) 무사증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86건, 34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명이 검거됐고, 2016년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영향

따른 국내 밀입국·무단이탈·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KODA
Korea Developer Association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도시를 바꾸는 벨류 크리에이터!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www.koda.or.kr